

# 자유무역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방안 - 군산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

## Directions of Development for the Gunsan Free Trade Zone

김용환(Kim, Yong-Hwan)\*\*

### 요 약 (ABSTRACT)

최근 군산에 자유무역지역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의 마산과 익산의 수출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새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성격상 기존의 수출가공구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제조, 물류, 금융 등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적인 성격을 지향하며, 특히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서의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성패가 서해안사대를 맞이한 국민경제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의 경험과 외국의 자유무역지역의 제도,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현안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제도개선과 자유무역지역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Key Word : 자유무역지역, 수출자유지역, 수출가공구, 외국인투자, FTZ, EPZ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추진현황 1. 자유무역지역 개요 2.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3. 군산자유무역지역 추진현황  III.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성과 평가 1. 마산-익산자유무역지역의 운영성과 2. 마산-익산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 3.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현안과제 및 문제점	IV.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지역 운영사례 비교 1. 대만의 수출가공구 2. 미국의 자유무역지역 3.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 4. 각국 자유무역지역 운영사례 비교  V. 자유무역지역 제도개선 및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방안 1. 제도개선 방안 2.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방안 3. 현안과제의 해결
참고문헌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논문은 호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호원대학교 경제통상정보학부 부교수

수출자유지역 또는 수출가공구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는 1970년에서 1980년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채택하여 온 주요 산업정책으로서 1970년대만 하더라도 10개국 40여개 지역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 외국인자본의 단순한 도입뿐만 아니라 생산 및 고용창출, 기술이전, 선진경영기법의 습득 및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의 경제적 효과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에 있어서 더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EPZ를 설치하고 있는 나라가 무려 43개 국가, 840개 지역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sup>1)</sup>

〈표 1〉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지역 현황

구 분	개 소	주 요 국 가
북 미	321	·미국 213, 멕시코 108
중 남 미	125	·도미니카 27, 혼두라스 15, 콜롬비아 9, 브라질 8
유 럽	81	·유고슬라비아 9, 불가리아 8
중 동	39	·터키 11, 요르단 7
아 시 아	225	·중국 124, 인도네시아 26
기 타	49	·케냐 14, 이집트 6, 호주 1
계	840	

자료 : World Export Processing Zones Association Directory, 1997.

향후 세계경제는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개발이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며, 단순 가공구 형태의 수출자유지역은 의미를 상실하고, 생산 및 교역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을 지향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점차 동북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군산지역은 환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군산지역은 전북지역 해상교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공단 건설, 새만금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중국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 및 국제물류의 중심기지로써 최적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군장국가공단 중 38만평<sup>3)</sup>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군산지역을 대 중국 진출기지 또는 국제적 물류통상기지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각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입지적으로는 중국의 연안특구, 기술개발구, 대만, 홍콩 등과 경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쟁적 관계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 입지적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산과 익산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성과

1) 군산시·군산상공회의소·호원대학교, 「군산자유무역지역 발전방안 세미나자료집」, 2000. 4.

2) 세계 모든 나라는 자유무역지역을 그 나라의 여건에 맞추어 미국의 FTZ, 대만의 Industrial Park, 유럽의 Economic Special Zone, 중국의 경제특구 등 다양한 형태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3) 군산자유무역지역 인근의 임항부지 52만평은 현재 자유무역지역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유무역지역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2003년에 추가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를 평가해 보고, 신규로 지정된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주요 지정내용과 제도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며,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추진현황

### 1. 자유무역지역 개요

#### (1) 자유무역지역의 의의 및 유형

자유무역지역의 연혁은 자유항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항의 연혁은 기원전 2000년경 이전에 이미 중계를 목적으로 한 페니키아의 활동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4)</sup> 그러나 자유항의 기원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는 중세기 이탈리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당시의 독점무역을 풀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는데 성공한 이탈리아는 리보르노(Livorno)에 대하여 특권을 부여하였는데 이것을 자유항의 효시로 본다.

근대적인 의미의 자유무역지역이란 일반적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수입세 및 관세의 부과수가 유보되며, 통상적인 세관절차가 생략 또는 간소화되는 지역으로 특정국가에서 관세영역 밖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 기능과 역할의 차이에 따라 교역중심형 자유무역지역과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 교역·생산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분류<sup>5)</sup>하거나, 지역의 위치에 따라 항구에 위치한 자유항(free port area), 내륙지에 위치한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분류<sup>6)</sup>되기도 한다.

#### 1)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이란 자유지역 중에서 원재료를 반입하여 제조·가공 등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수출가공구(export-processing zone)로서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통해 공업 및 수출의 진흥, 고용확대, 선진 외국기술의 습득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생산중심형 또는 공업 자유무역지역의 주요특징 및 기능은 수입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한 관세징수가 유보되며, 법인세, 소득세 등 내국세에 대한 일정부분 감면이 허용될 뿐 아니라 등록세 등 지방세도 감면된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 내용으로 외자도입 및 입주허가, 각종 등록과 면허, 생산제품의 수출입허가 등이 생략되거나 완화되며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본국송금도 가능하다.

그 외 이 지역에 유치된 업체나 업종에 대하여 벤처산업 등 특정업종에 대해 국가가 일정부분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R&D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공단이 일정부분 자금을 지원하고, 시설투자

4) A·E Branch, *Element of Port Operation and Management*, London : Chapman and Hall, 1986, p.107.

5) 교토협약 부속서에 자유무역지역 개념에 대한 세계관세기구(WCO)가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다.

6) 김학소,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화를 위한 수출자유지역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양항 국제 Forum 및 국제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1997, p.262.

나 확장을 할 경우 국가에서 대부를 해주고 있으며 총 자본 중 특허권과 노하우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고 있다.<sup>7)</sup>

#### 2) 교역중심형 자유무역지역

교역중심형 자유무역지역은 주로 항만지역에 설치되며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롭고 항내에서 상품의 하역, 검사, 분류, 보관, 청소, 제조, 분배, 전시, 샘플링, 포장, 검인, 상표부착, 경매 등 교역관련 모든 활동이 가능하고, 항내에 사람의 거주가 허용되며, 제조·가공 기능보다 중계·비축 기능으로서 중계무역거점 및 분배기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업중심형 또는 교역중심형인 이 지역의 주요 특징은 그 나라가 수입을 금지하는 소수의 품목을 제외하고 수출입승인절차가 필요 없으며, 환적화물의 경우 세관의 이적허가 절차가 없으며, 선박입항 전에 제출하는 적하목록도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여 주변국의 환적화물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항만의 기능이 단순히 해륙운송의 연결점이 아니라 중계·비축기지로서 다양한 물류시설과 장비를 동원하여 서비스를 함으로서 중계무역의 거점 및 분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지역내에서는 관세 및 세관절차가 없이 화물의 반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장비탑재, 해체작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입 할 때에는 세관에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sup>8)</sup>

#### 3) 교역·생산복합형 자유무역지역

교역·생산복합형 자유무역지역은 교역형과 생산형의 혼합형으로 상품의 제조·가공, 하역, 검사, 분류, 보관, 청소, 분배, 전시, 샘플링, 포장, 검인, 상표부착, 경매 등과 무역 및 금융 등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이 지역의 주요 특징 및 기능은 생산중심형과 교역중심형의 주요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교역중심형의 항만과 달리 제조·가공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다. 이 지역에서는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통관 할 경우 제품과 원료 중 저세율을 선택하여 관세의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쿼터상품의 지역내 보관이 가능하다.<sup>9)</sup>

#### 4)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비교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제도로 관세자유지역이 있는데, 이는 화물의 반출입·보관·상표부착·조립·가공 등을 자유롭게 수행 할 수 있는 물류중심의 비관세 경제특구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제조, 금융, 물류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며 외자유치와 무역진흥 및 지역개발에 주목적을 두며, 관세자유지역은 국제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되는 지역이다.

7) 우리나라의 과거 수출자유지역(마산, 익산), 대만의 수출가공구(카오슝등), 신죽과학공업원구,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미국의 sub-zone 등을 세계주요 운영사례 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

8) 독일의 함부르크, 브레멘 등 북부의 항구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및 로테르담항, 영국의 리버풀항 등이 교역중심형 자유무역지역으로서 명성이 있다.

9) 이 지역은 판매, 전시, 무역, 금융, 운송주선 등의 거래 및 물류촉진 기능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자유무역지역, 홍콩, 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표 2>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제도의 비교

구분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근거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정목적	외자유치, 무역진흥 및 지역개발 촉진	국제적인 물류중심지 육성
대상지역	제조·물류시설 설치 등에 충분한 부지확보가 가능한 공항만 주변지역, 산업단지 등	공항만 및 배후지, 유통단지·화물터미널
입주업종	제조업, 물류업, 무역업, 지원서비스업	하역·운송·보관·전시·판매·단순가공, 물품보수 등
입주절차	산자부장관 허가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체결후 세관장에 등록
지정절차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산자부에 지정요청→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 →산자부 지정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재경부에 지정요청→관세자유지역위원회 심의 →재경부 지정
관리권자	산자부장관	항만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지역을 관리하는 자
기업지원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가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가능	좌 동

## 2.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 물류·유통업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다기능 복합지역인 경제특구를 지향하고, 수입관세의 면제·통관절차의 간소화·관련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일괄 제공되며, 2001년 8월 현재 총 3개소(마산·익산·군산)에 지정되어 있다.

<표 3>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구분	마산자유무역지역	익산자유무역지역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시기 / 면적	70. 1월 / 240천평	73.10월 / 94천평	00.10월 / 380천평
입주업체수	75개사(외국업체 46개사)	33개사(외국인업체 6개사)	외국업체는 120 ~ 130여개사
고용인수	13,365명	1,619명	2만여명*
외국인투자	194백만\$	8.7백만\$	20억\$*
수출액(00년)	44억\$	1.5억\$	30 ~ 50억\$*

주 : 군산자유무역지역의 "\*" 수치는 자유무역지역 조성후 전망치임.

마산·익산 자유무역지역은 70년대에 조성되어 그간에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오늘날은 면적규모 협소, 외국인투자업체 감소, 지원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군산자유

무역지역은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기존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서해안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3. 군산자유무역지역 추진현황

#### (1) 지정배경

##### 1)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수출 증대의 최적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무관세, one-stop service 체계의 구축, 국내내입 가능성 등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인 투자가 수출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외국인 전용단지보다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단순히 외자유치가 주목적인 외국인 투자지역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수출증대, 선진외국기술의 습득을 도모할 수 있다. 즉,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설비 및 원자재를 보세상태에서 관리하며, 수출입 및 통관절차 및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며, 공장부지의 저렴한 공급 및 전력, 용수 등의 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접촉 중인 독일, 대만, 미국 등 12개 업체에서도 자유무역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 2) 동북아 경제권 중심지로서의 최적 입지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되어 물류의 원활한 흐름과 배후생산기지로서의 서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서해안 지역 중 군장국가공단이 항만, 공항, 고속도로, 철도 및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과 역외가공 및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하여 연관효과가 크다는 면에서 목포항 등 타 서해안 지역 항만보다 유리한 여건에 있다.

##### 3) 익산자유무역지역의 대체지정 필요성 대두

현재 인근에 위치해 있는 익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임해지역이 아니라는 취약성을 안고 있어 자유무역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지정되어 있던 자유무역지역 47만평 중 37만평이 이미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된 상태여서 군장국가공단을 호남권의 유일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대체 지정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 4) 저렴한 분양가격

군장국가공단은 국가산업단지 중 분양가격이 저렴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이 적고 향후 항만, 도로,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대폭적인 분양가 인하도 가능하다.

<표 4> 국내 주요 국가산업단지 분양가격

(단위 : 천원/평)

구 분	군장	아산	광주첨단	오창	녹산
조성원가	312	420	677	339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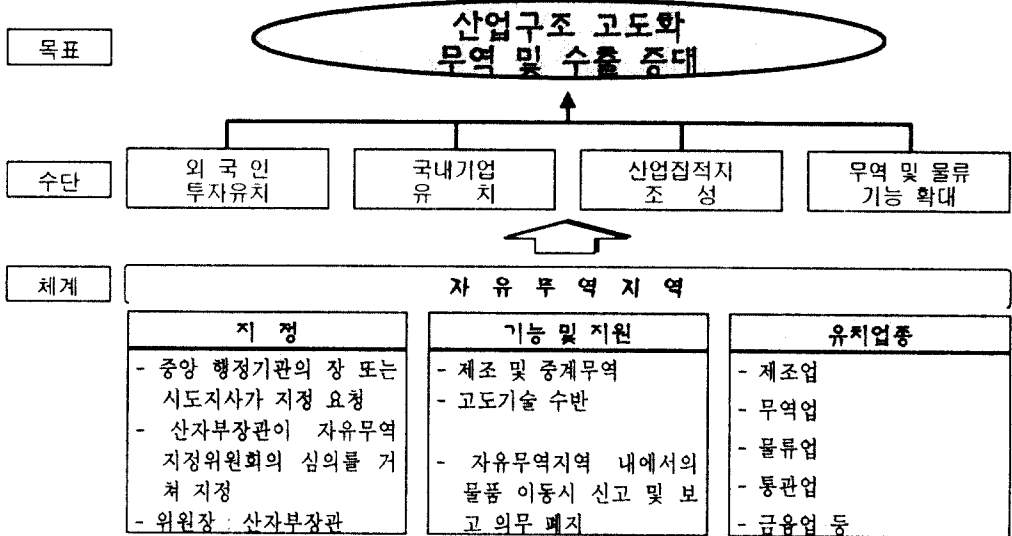
#### (2)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내용

##### 1) 지정 목적

군산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제조·물류·무역·금융 등이 복합된 국제자유무역지역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

지합과 아울러 대중국 및 동북아의 생산·물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자유무역지역 법 체계



2) 주요 지정내용

군산자유무역지역은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내 약 38만평의 토지에 2000년 5월부터 2004년 5월 까지 개발하되, 1,8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구분 및 지구별 이용계획을 보면, 생산지구(1,128천㎡), 물류지구(39천㎡), 지원지구(33천㎡)로 구분하며, 생산지구에는 공장규모별, 업종별 구분, 배치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증대와 관련업종간 집적화를 유도하고, 물류지구에는 중소기업업을 위한 물류창고를 건립하며, 지원지구에는 공공지원시설, 생산활동지원시설, 후생복지시설, 주차장 등으로 구분 배치한다.

유치업종 및 입주자격을 보면, 제조업은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계, 자동차, 철강, 금속, 조립 금속 및 기타 연관업종을 우선 입주대상으로 하며, 물류업, 무역업, 기타 서비스업은 용도지역의 범위 내에서 내·외국인 차별 없이 입주가 허용된다.

(3) 군산자유무역지역 추진현황

1) 자유무역지역 조성공사

현재 군산자유무역지역은 부지조성을 위한 준설매립공사가 완료되었고, 2001년 8월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자유무역지역 내 모든 기반시설공사는 2002년 말에 최종 완료되고, 2003년 1월부터 입주업체의 공장가동이 가능하다.

2)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첨단·고도기술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1천만\$이상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으로서 1백만\$이상 투자하는 경우, 기계·자동차분야 또는 공정상 이와 연관된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10년간 무상임대(재연장 가능)하며,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40원/m<sup>2</sup>/월을 징수한다.

<표 5> 군산자유무역지역 월 임대료 현황

(단위 : 원/m<sup>2</sup>)

구분	한국		중국			대만		
	마산	익산	상해 외고교	상해 송강	대련	카오슝	난쯔	타이펑
토지	124	94	95\$/m <sup>2</sup> /50년 (203)	38\$/m <sup>2</sup> /50년 (81)	35\$/m <sup>2</sup> /50년 (75)	10.5 NT\$ (390)	11.5 NT\$ (427)	9.15NT\$ (535)
표준 공장	2,617 ~ 3,052	1,768 ~ 2,082	41\$/m <sup>2</sup> /50년 (889)	2.8\$/m <sup>2</sup> /월 (3,600)	0.5RNB/m <sup>2</sup> /일 (2,325)			

주 : 중국 및 대만의 ( ) 내는 원화환산 월 임대료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고, 이의 재연장도 가능토록 개편하였으며,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직접 역외가공장소로 반입하거나, 역외가공장소에서 직접 외국으로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역외가공 승인제도를 개선하였다.

### 3) 자유무역지역 추진지원체제 구축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군산자유무역지역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 전략 마련 및 법정부적 정책 협조 등 현안사안 등을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군산자유무역지역 입주촉진 대책반」을 구성하여 외국의 전략적 유치대상기업 선정 및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희망 국내업체 발굴,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담실」을 설치하여 투자 희망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sup>10)</sup>

## III.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성과 평가

### 1. 마산·익산자유무역지역의 운영성과

그동안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수출자유지역은 마산과 익산에 각각 1970년과 1973년에 지정되었으며, 마산과 익산은 대만의 카오슝과 같이 생산중심의 수출가공구역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외자의 유치를 통해 수출증대, 선진기술의 도입, 고용창출 등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1997년말 현재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은 2,201 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단위 면적당 수출액은 창원, 반월, 구미 등의 공단에 비해 4-18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마산 및 익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대 초 설치 이후 수출 증진, 기술도입, 지역개발 등에

<sup>10)</sup> KDI는 군산자유무역지역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2000년 12월)에서 독일 기계공업이 전문화되어 경쟁력이 강하며, 장차 해외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의 유치를 제안하였다.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자유무역지역은 그 동안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업체의 집적지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90년대 들어 1980년대 후반의 침체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생산구조면에서 고용인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총생산액이 늘어나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및 기술집약적 생산구조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을 때 대표적인 수출기업의 집적지로 주목을 받았으며,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위한 유용한 모범지역으로 재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마산수출지역은 전국 공단 면적의 0.2%에 불과하지만 1998년 약 24억 달러를 수출(우리나라 수출액의 1.7%)하여 수출신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도 전기·전자산업 등으로 고도화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결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대만과 함께 세계 수출가공구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대외 인식도가 높은 편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성공적인 자유무역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장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분양방식을 취하지 않고 국가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공업용지를 매수한 후 입주업체에 저렴한 가격에 임대료를 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개발과 운영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 민원업무와 입주업체의 생산, 무역활동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정부기관(관리스, 세관 등)이 상주하여 현지에서 종결처리 하는 체계를 갖추어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협력적 노사관행의 자율적 조성으로 노사관계가 안정됨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국내 유치를 늘리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2. 마산·익산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

### (1) 마산자유무역지역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좁은 부지면적, 확장 공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 중 좁은 부지면적은 일관되지 못한 정책추진과 수출가공구라는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관되지 못한 정책추진으로 당초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 중 일부분이 봉암공단(24만평)이라는 지방산업단지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봉암공단을 중앙에 두고 1, 2공구로 분리되어 있으며 1, 2공구간에는 연결도로도 없는 상태이다.

특히 지정 당시 수출가공구의 성격상 생산공간만을 고려하였을 뿐 원활한 생산을 위한 지원기능으로서의 물류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특히 컨테이너 하적장, 주차장 등의 부족문제는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시급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물류공간은 향후 자유무역지역의 성격이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출가공구 성격을 탈피한 생산·교역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을 고려할 때 물류기능의 수행을 위한 공간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입주기업체의 경우 생산량 규모 확대를 위해 기존의 공장을 증축하거나 새로운 장을 신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장의 신·증축을 위한 확장 가능한 별도의 용지를 두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심각한 공간 부족 현상을 느끼고 있다.<sup>11)</sup>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을 신규 지정할 경우 현재에는 당장 필요로 하지 않지만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지 면적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외국인 투자업체수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국인 투자업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입주업체수는 1980년대 중반과 거의 변화가 없지만, 구성 면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의 철수로 인해 현재는 내국인 단독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비율 10% 미만의 합작투자기업이 전체 입주기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의 업종구성을 보면 금속, 섬유, 화공, 잡화 등 저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높고, 수출에 기여하는 역할도 미미하다. 이들 업체가 마산자유무역지역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달하여 부지면적에 비해서는 수출 기여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 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가 매우 저렴(인근지역의 14%수준)하여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화공, 섬유 등과 같이 생산액 단위당 부지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입지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외국인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 기업체만을 위해 설치된 자유무역지역에서 저부가가치의 내국인 투자기업체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초 일부 잔여부지의 임대 촉진을 위해 수출 중심의 순수 내국인 투자 기업체도 입주를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1980년대 말 국내 임금수준의 상승 및 민주화에 따른 노사분규의 심화로 단순 가공조립형 외국인기업이 철수하면서 합작선인 국내기업에 소유지분을 양도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셋째, 자유무역지역 내 부도기업의 건물 처리시 관리기관이 양수권을 갖고 있지 못하여 법원의 경매에 의해 양도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주요건과 무관하게 건물을 경락 받은 기업이 입주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 (2) 익산자유무역지역

익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내륙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반입과 완제품의 반출에 있어 물류비용과 시간비용의 추가 소요로 인해 공항이나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편이다. 자유무역지역을 신규로 지정할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항이나 항만을 접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단위 면적당 수출액을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하여 보면 익산자유무역지역은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비해 10%에 불과하여 부지생산성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익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중 저부가가치 섬유업체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마산자유무역지역과는 달리 내세울만한 대기업이 거의 없다는 점 때문이다.

## 3.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현안과제 및 문제점

### (1) 표준공장의 건립문제

11) 산업연구원, 「수출자유지역의 제도개편 및 신규지정 방안(산업자원부 최종용역결과보고서)」, 1999. 8., pp.32-34.

군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건립문제에 대해 KDI는 표준공장의 경우 그 성격상 조립가공 특화 소규모업체 등이 입주할 희망할 것이므로 이들의 수요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첨단 중소벤처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산업집적이 조성되는 단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표준공장은 국가가 국유토지에 공장건설을 건축하여 입주기업에게 임대하여주는 일종의 아파트형 공장형태로서 입주희망업체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는 표준공장 7개동(3층 규모 연건평 21천 평)의 건축소요예산 60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와 KDI가 아직도 표준공장 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향후 표준공장의 건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이다.<sup>12)</sup>

<표 6> 자유무역지역 내 표준공장 현황(2001년 7월 현재)

구 분	마산자유무역지역		익산자유무역지역	
	총규모	표준공장	총규모	표준공장
면 적 (천평)	240	27	94	5
입주업체(개사)	75	22	33	15

(2) 선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위한 환경조성 및 체계적인 활동 미흡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첨단산업체의 유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활성화에 관건이 되나, 외국인투자 유치환경이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아태지역 본부 유치실태 조사결과,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24개사, 20개사를 유치한 데 비해 우리는 1개사에 불과하여, 이는 우리의 언어소통상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하기 힘든 비즈니스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13)</su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외국인투자 분석자료에 의하면, 최근의 투자부진은 세계경제 침체요인 외에도 종합적인 투자환경 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투자 개방도가 국제수준으로 개선 되었음에도 투자선호도는 미, 영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홍콩, 태국 등에 비해서도 낮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4)</sup>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활동에 있어서 유관기관 간에 연계성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유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범위 협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국세 10년, 지방세 8년(최장 15년까지 가능)으로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감면대상을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제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하여 중소기업은 사실상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2) 2002년 예산에 표준공장 2동의 건립을 위한 17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13) 조선일보, 2001년 7월 30일 보도자료 내용이다.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동향분석 속보 제01-16호, 2001년 6월 25일 참조.

〈표 7〉 중국 및 대만의 자유무역지역 조세우대내용

구 분	우 대 내 용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율 우대적용 : 여타 지역 적용세율(30%)의 절반인 15%를 적용하며, 수출비율 70%이상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10%세율 적용</li> <li>· 소득세 감면 : 10년 이상 제조업체는 이윤발생연도로부터 2년 간 100%감면, 그 후 3년 간 50%감면(7.5%세율 적용)</li> <li>· 부가가치세, 소비세 : 면제</li> </ul>
대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 화물 증개소득에 대하여는 10%세율 적용</li> <li>· 건물 취득세, 부가가치세 : 면제</li> <li>· 재산세 : 자기소유 공장건물은 1.5%(정상세율 3%)</li> </ul>

(4) 관세자유지역과의 관계설정 문제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서, 입주 시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조치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양자의 중복지정 가능성 내지는 구분운용의 실효성 미약 등을 이유로 양자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이미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된 마산 및 군산의 경우 항만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을 하향 조정하여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지정항만의 요건은 연간 1천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이 있고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고, 항만 및 배후지의 면적이 1백만㎡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마산항 및 군산항은 현재로서는 동 요건 충족에 미흡한 실정이다.

(5) 자유무역지역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 제기

1) 자유무역지역 제도도입의 비효율성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도입은 배후권 화물유통산업의 활성화, 직간접 고용창출, 외화가득, 수출경쟁력 증대, 해외자본투자의 증대, 잠재적 기술이전의 증대, 중계무역과 환적항 기능의 증대, 금융산업 및 해운산업의 발전효과 등을 가져온다.

그러나, 자유지역제도는 직접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파생되는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시와 구역의 설정 등도 중요하겠지만, 불확실한 미래의 파생이익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의 창출과 이용자들의 이해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간의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하거나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sup>15)</sup>

자유무역지역의 설치운영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자유지역제도 도입에 따라 포기하는 조세수입 만큼의 과중한 경제부담, 즉, 자유지역 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기하는 조세수입 만큼의 경제적 부담이 지역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둘째, 국제무역 질서상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셋째, 자유지역 제도로 인해 유인될 수 있는 선복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위험부담도 있고, 넷째, 외국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과도한 외자의존형의 지역 경제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며,

15) 이러한 문제해결의 방법은 최선의 IT기술을 도외시키고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밀수 등에 의한 국민경제의 침식 등을 들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sup>16)</sup>

또한, 자유지역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유지역 내에 소재 한 업체와 구역밖에 소재한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문제시 될 수 있는 점이 앞서 세 번째 문제점인 선투자에 따른 불확실한 수익 보장과 다섯 번째 문제점에 해당하는 자유지역 내의 밀수의 가능성 등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일반적으로 항만이나 수로, 철도, 간선도로 등을 이용한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국내지역으로부터는 접근을 차단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대체로 섬이나 입해구역 등 물동량이 반출입이 많고 배후에 상업·공업단지를 갖춘 대규모 무역항이나 국제공항 인근에 지정되는 경향이 많고 자연적으로 외부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위적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구인 게이트를 설치하여 세관관련 공무원들의 엄중한 감시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제도를 언급할 때에는 펜스의 설치나 보안장치에 대한 언급, 그리고 출입구 게이트나 검사장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원래 자유지역제도 자체가 추구하는 구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이나 외부로부터의 원자재 수입 및 조달, 자유지역 내 근로자의 출입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게 되어 자칫 관련 입주업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만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다.<sup>17)</sup>

또한, 앞서 여러 가지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하였지만, 자유무역지역 제도 자체가 가진 절대적 한계성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첫 번째 문제점인 자유지역 제도도입에 따라 포기하는 조세수입과 세 번째, 자유지역 제도로 인해 유인될 수 있는 선복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위험부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인 재정경제부나 산업자원부의 입장에서도 부담이거니와 지역조세를 감면해야 하는 지자체나 자유지역 내 입주하게 되는 입주업체 들에게도 공히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칫 제도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2) 자유무역지역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

따라서 자유지역제도를 시행하는 정부부처나 입주업체들은 자유지역 자체가 커다란 수익을 발생시켜 주리라는 환상을 버리고 자유지역의 설치나 입주자체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자유지역의 활성화방안 및 자유지역 내 수익창출을 위한 자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자유지역 내 입주업체의 수익은 입주업체들간의 공동화사업이나 협업화 형태를 통해서만이 창출될 수 있다고 하는 현실적이고 엄격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극적으로는 공동화사업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자체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이나 자유지역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비즈니스모델의 창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자유지역내 입주업체의 수익창출 모형으로는 입주업체들간의 공동 원자재구입이나 공동 판매의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으며, 공동마케팅 노력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후원을 받는 지역마케팅(regional marketing)의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6) 동아대학교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Free Zone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항만발전 전략에 관한 워크샵자료집」, 2001. 9 참조.

17)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세관당국이 물리적인 체크를 안보고 실시간 물류이동이나 관세부과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최첨 IT 기술로서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화의 추세 속에 개별업체들의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면 기왕 비싼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유사한 지역 내 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이 고가시스템을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 ERP시스템이 포함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비는 향후 기업간 정보의 공유나 협동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투자나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단일 자유지역 내에는 유사한 업종이나 관련업종들이 밀집해 있을 것이므로 원자재의 공동구입이나 공동판로의 개척, 공동홍보 등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인터넷 웹 환경의 이용은 불가피할 것이므로 입주업체 전체를 아우르는 포털환경의 구축을 통한 전체 자유지역의 홍보와 마케팅, 그리고 내부에 입주하는 개별업체 홍보의 병행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유무역지역과 같이 구역 내에 제조업체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와 중간 생산물, 완성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끼리 부분적인 공급연쇄망(Supply chain)을 형성하는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V.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지역 운영사례 분석

### 1. 대만의 수출가공구

#### (1) 현황

대만의 자유무역지역은 수출가공구(EPZ) 3개 지역 58만평을 운영 중이며, WTZ(Warehouse Transshipment Special Zone)라는 신 개념의 가공구 3개 지역 91만평을 추가 건설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마산, 익산과 비교하면 면적규모는 현재 1.7배, 확장후 4.3 배, 수출은 3배 등이며, 업체수는 2배, 종업원수는 4배에 이르고 있다.

#### (2) 수출가공구의 관리 및 운영특징

수출가공구의 관리는 경제부 산하 加工出口區管理處에서 관장하며 관리처 직원은 약 950명이다. 예하기관은 3개 분처(기존 3개 EPZ 관리)와 1개 판사처(추가 건설 중인 3개 WTZ 관리)로 나누며 분처장은 국장 내지 차관보급이다. 지원기관의 관리는 소방, 보건, 복지, 환경, 등기업무 공무원을 관리처에서 직접 임명 관리하고, 경찰중대에 대하여는 직원 임면권이 없지만 업무상 지도감독하고 있다.

세무서·세관 등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간접관리하고, 병원·우체국·은행 등을 가공구내에 수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8> 대만의 자유무역지역 현황

지역	자유무역지역명	설립	면적	업체수(개)	종업원(명)
카오슝 지역	중따오 EPZ	'66	20만평(22만평으로 확장 공사중)	86	15,985
	난체 EPZ	'69	30만평	85	32,050
	청궁 WTZ	'97	24만평	-	-
	샤오강 공항 WTZ	'97	10만평	-	-
소계	-	-	84만평	171	48,035
타이쑹 지역	타이쑹 EPZ	'69	8만평	36	10,900
	중강 WTZ	'97	55만평	-	-
소계	-	-	63만평	36	10,900
총계	-	-	147만평	207	58,935

1) 기존의 수출가공구

대만의 수출가공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주요정책수단으로 활용 중이며, 표준공장을 건립 고부가가치 중소제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가공구내 토지·건물을 국가소유로 하여 저가 공급기반을 마련하되, 세제 및 one-stop 행정 등 기존 지원 방식 외에 물류·유통서비스 면에서의 지원책을 추진 중(영업세, 부동산관련세금, 연료세 등을 면제하고 물류유통기지를 건설)에 있다.

입주기업은 현재 일본 및 미국기업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이 35% 정도, 나머지는 내국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선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첫째, 노사분규가 없으며 노사분규 시에도 조정과정이 매우 원활하고, 둘째, 부품단지가 잘 구성되어 있어 외국 완제품기업의 입주조건이 좋으며, 셋째, 고학력 등 인력의 질이 높다. 또한 고부가가치업체에 대한 영업소득세 면제, one-stop 행정 등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공구 입주시에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시간 30분 이내에 처리한다.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은 6-8인이며, 주석 1인, 경제부 상업국, 공업국, 무역국 각 1인, 세관, 재정부소속 금융관련 공무원 1-2인 및 유관 대학교수 1-2인으로 구성된다. 주요 심사내용은 자금 동원능력, 환경오염 여부, 기술의 낙후성 등이다.

2) 신자유무역지역의 추진

대만 경제부는 종전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을 생산·물류 및 유통을 포괄하는 신개념의 자유무역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즉 홍콩을 대신하여 신자유무역지역을 대만·미주·유럽·동남아간 경제중심지(Regional Economic Center)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하여 항구인접 고가의 요지를 국가에서 수용하여 “빌딩” 식 공장을 지어 분양 또는 임대하고 있는데, 샤오강 WTZ의 경우 약 1만평, 7층 높이 3개 동이며, 항구·공항 등 물류거점과 수출가공구간에 고가도로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

(3) 대만 수출가공구의 평가와 시사점

대만 수출가공구 설치목적은 크게 선진기술과 외국자본의 도입,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한 수출증

대, 이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안정 등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1966년 12월 3일에 극동에서는 최초로 카오슝 수출가공구가 설치되었고 이어서 1969년과 1971년에 난셴와 타이쑹 수출가공구가 각각 설치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대만은 수출가공구의 설치시 교통, 통신, 항만 등의 입지조건이 양호한 곳을 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 및 수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도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이처럼 대만의 수출가공구가 성공적으로 운영 될 수 있었던 것은 적절한 입지 선정과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만은 이에 만족치 않고 외국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1980년 新竹科學工業園區에 입주가능한 업종이나 기업은 첨단산업 혹은 매출액의 7%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적도 약 600ha에 달해 기존의 수출가공구와는 그 성격이나 규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말 현재 新竹科學工業園區 내에 입주한 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 첨단산업 관련기업들이 기업체수, 생산액, 종업원수에 있어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있다.<sup>18)</sup> 입주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있어서도 IC와 실리콘웨어의 비중이 50%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내 생산비율의 100%를 점하는 등 新竹科學工業園區는 대만의 첨단산업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은 당초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기존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수출가공구를 설치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진 후 1980년대부터는 자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외국의 첨단기술산업의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괄목한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대만과 비슷한 경제성장 과정을 밟아 왔으면서도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뒤져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대만의 수출가공구 운영제도와 이의 발전적 활용경험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대만은 수출가공구의 설치시 교통, 통신, 항만 등의 입지조건이 양호한 곳을 택하여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정책이 있었다. 둘째, 대만은 외국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수출가공구와는 그 성격이나 규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첨단산업 혹은 연구개발 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기술개발 및 확산에 노력하였다. 셋째,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시책의 선진성이다. 신속한 투자절차, 간단한 통관절차와 관세, 화물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등의 감면 혜택, 저가의 공장부지 임대(년간 공시지가의 5%), 완벽한 지원시설(세무사, 은행, 보건소, 탁아소, 소방, 경찰 및 각종 지원시설 입주), 정보망 구축지원(전세계의 정보체계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대만은 외국인투자를 자국의 경제성장에 활용한 정책당국의 앞선 안목과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한 데 기인한 것이다.

## 2. 미국의 자유무역지대

18) 대만과 중국에 관한 내용은 1999년 6월 23일-30일까지 군장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군산시, 군산시의회, 학계대표의 대만, 중국 등의 자유무역지역 시찰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1) 현황

미국은 현재 전국 213개 FTZ에 3,550개 기업이 입주(고용 37만명), 연간 1,680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미국의 FTZ 운영은 25년간 연평균 15% 수준으로 성장을 거듭한 성공적인 정책이며, 현재 90개의 FTZ에 대한 신규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의 FTZ는 당초 제조업 중심이었으나 참고업·정보처리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2) 행정조직

미국자유무역지대의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은 FTZ 위원회(상무부장관(의장), 재무부장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Zone의 설립·가동 및 운영 의결, FTZ 관련법규 제정, 관계기관과 업무협조 및 의회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무조직으로는 제도를 총괄하는 상무부 국제통상담당차관보 산하 FTZ 사무국과 현지 실무감독 기관인 상무부로부터 지정받은 세관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

(3) 발전추세

연대별로 보면 70년대초까지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여 FTZ는 10개에 불과하였으나 70~80년대 중 FTZ 숫자가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90년대에 들어서도 FTZ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발전요인을 보면 국제무역환경의 복잡화, 수송수단·교통의 발달, 저장기술의 발달 등 외부여건의 변화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추진 즉, 대상지역을 항만·공항 주변에서 내륙으로 확장시켜 입지적 제약 요인을 극복하거나, 폐쇄적인 부지영역에 집착하지 않고 특정 장소를 Zone과 非Zone간 기업실정에 맞게 수시로 상호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지방정부가 FTZ 설정에 깊숙이 관여하도록 하는 local sponsor 제도를 도입하였고, sub-zone을 창출하고 GPZ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 3.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

중국은 국가전역에 경제기술개발구를 설치하여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곤산시와 연태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중국 곤산시의 경제기술개발구는 면적이 28km<sup>2</sup>(850만평)이며 입주기업은 1,400개로서 외자기업이 450개, 유치된 외자는 400억불에 이르고 있다. 1985년에 시작된 이 제도에 의해 곤산시의 인구는 7만명에서 1999년 현재 56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직접고용효과는 17만명이다. 개발구 인근에 부품업체 1,200개가 입주해 있으며 공업발전에 따라 농업, 상업 등이 병행 발전하고 있으며 외국인 2,000명이 상주하고 있다.

개발구관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구관리행정법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지원기관까지도 관장하는 행정의 일원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로서는 판공실에서 일괄행정 서비스를 추진하되 독립적인 판공실을 운영하고, 외국인기업 입주상담 시 약 5분내에 해결할 수 있는 신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감면 및 저가의 토지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곤산시 개발구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모든 기업과 종업원의 공·사생활까지 지원하고 상담하는 봉사자세와 부도기업 정리문제 등 사후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른 기업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편 산동반도에 위치한 연태시의 경우 지정면적은 36km<sup>2</sup>(1,080만평)로서, 건설완료 360만평, 건설중인 부지가 480만평이다. 입주기업은 650개 업체이며 이 중 외국기업은 23개국 500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개발구의 관리조직은 개발구위원회와 산하 1실 11국이며 운영체계는 곤산시와 같이 모든 지원기관을 관장하는 행정일원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외국기업의 유치시책으로는 관세, 수입세, 지방세 감면 혜택, 저렴한 토지임대(평당 연간 11,000원 정도), 일괄지원 행정 서비스(프로젝트 추진센터, 기업관리센터, 세관, 은행 등 모든 지원기관이 위치) 체계 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 4. 각국 자유무역지역 운영사례 비교<sup>19)</sup>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을 기타 외국의 운영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세계 각국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현황

국 가	투자전담기관	체제 및 운영현황
한 국	중앙: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지방: 외국인투자진흥관	- 양 기관의 분리운영 - 단순행정업무에 그침 - 지자체에서 운영
영 국	중앙: 대영투자국(IBB) 지방: 각 지역개발청 전국: 신도시위원회 등	- IBB는 상공부 소속 - 지역개발청에는 민간도 참여 - 산업용지, 택지 등 개발지원
아일랜드	중앙: 산업개발청(IDA) 지방: Regional Office	- 독립기관으로 운영 - 8개 주요 지방도시에 설치
말레이시아	중앙: 산업진흥청 지방: State Office	- 국제통상산업부 산하 기관 - 13개 주에 설치

첫째, 한국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독립된 전담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중앙부서의 관련 담당과에서도 세제, 금융, 인력 등과 관련한 지원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타 국가에서는 중앙부서 뿐 아니라 지방에도 대부분 투자유치전담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한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투자홍보, 투자인가 및 공장설립 등 일련의 각종 인·허가업무가 해당기관별로 분리 운영되어 실질적인 one-stop service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19)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1998), pp.54-66.

<표 10> 국별 one-stop service의 비교

분야	한국	영국	아일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투자정보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IBB, 지역개발청	IDA	IEAT	MIDA
투자 인허가	개별 신청	지역개발청	IDA	IEAT	MIDA
인센티브	개별 신청	IBB, 지역개발청	IDA	BOI	MIDA
산업입지	개별 확보	지역개발청	IDA	IEAT	개별 확보
공장건설	개별 허가	지역개발청	IDA	IEAT	개별 허가

또한 지자체로의 권한 위임 미흡, 중앙정부의 승인결정 지연, 법적 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해 토지 매입에서 공장준공까지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어 외국인투자자들의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한국의 산업용지 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개발주체가 개발비용의 조기회수를 위해 분양제를 선호함에 따라 임대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산업용지 조성시 은행, 우체국, 택지 등 제반 지원시설이 동시에 구비되지 않아 입주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서만 시설재용 상업차관(5년 이상) 도입을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허용해 왔으나 IMF 관리체제 하에서 199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여신금지업종을 제외한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상업차관의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 및 아일랜드는 보조금 지급 이외에 정부 차원에서의 별도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럽투자은행 및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융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제도를 갖고 있지 않으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시중은행에 금융지원을 추천해 주고 있다.

<표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지원제도

구 분	한 국	영 국	아일랜드	태 국	말레이시아
관련기관	해당 부처	대영투자국 지역개발청	산업개발청 지역개발 사무소	공업단지 관리청	산업진흥청 MIDA
지방기관의 역할	위임사항만 처리	대부분 해결	단순 연락	단순 연락	단순 연락

다섯째, 우리나라에는 보조금 지급의 재원, 요건, 절차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실업수당을 기업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EU차원에서도 별도의 보조금 지원제도가 있어 특정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투자를 완료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별도의 사후지원제도가 없다. 영국의 경우 아일랜드의 산업개발청, 태국의 공업단지관리청 등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규지정된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환황해권의 경쟁대상국인 중국과 대만의 자유무역지역에 비해 토지가격이 비싸고, 인건비가 매우 높으며, 각종 행정서비스도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즉, 군산자유무역지역은 높은 분양가, 높은 인건비,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행정서비스 등으로 자유무역지역 관리제도에 획기적인 변화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 12〉 군산자유무역지역과 대만·중국 자유무역지역과의 비교

명칭	토지가격	인건비	행정서비스	입주기업
군산자유무역지역	-평당 32만원 시가분양	-월60-90만원	-각급 기관 개별인허가 -교통환경영향평가등 실시시 1년이상 소요	-입주상담업체 : 독일 Huels사등 16개업체 80만평
중국 경제기술 개발구 (곤산시)	-공업부지 연간 평당 11,000원 정도 -개발구위원회에서 우대기업으로 결정시 임대료 하향조정 가능	-월73,000원	-곤산시개발구 판공실에서 외국기업 입주상담 5분이내 결정 -외국투자자 위탁대리기구에서 신청서류 일괄작성처리	-총 1,400개 기업중 입주 외 자기업 450여개, 400억달러 투자
중국 경제기술 개발구 (연태시)	-공업부지 연간 평당 11,000원 정도	-월4-7만원 정도	-연태시개발구 외국투자본부회사에 위탁하여 모든 수속처리	-총 65개기업 입주, 외국기업 23개국 500개업체
대만 수출 가공구 (카오슝)	-토지임대 연간 평당 17,000원 정도	-월100만원 정도 -동남아등 외국근로자 자유채용	-판사처에서 신청서류 작성후 2주이내 일괄처리 (통관수속은 3시간 30분이내 처리)	-'98년도 투자실적 총계 2,892백만 달러 -외국인합자 2,210백만 달러 (73%), 국내기업 772백만 달러 (27%) -추가조성형태는 제조+물류 복합수출단지로 전부 임대방식

## V. 자유무역지역 제도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방안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면 크게 자유무역지역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 자유무역지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방안 및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된 최근의 현안문제 해결방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제도개선 방안

#### (1) 선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조성 및 체계적인 활동 강화

외국인투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중앙정부 및 지자체,

상공회의소, 관련업종 단체 등 민관 유관기관간에 유기적 연계하에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Global standard 차원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조세·교육·의료·주택 등 외국인 경영·생활 환경의 개선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안정 및 고충처리 활동을 강화하며, 항만·도로·철도 등을 군산자유무역지역 입주시기에 맞추어 조기에 구축하여야 하며, 투자 가능성이 높은 타겟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업종에 기술 집약적인 훈련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고가의 훈련장비를 사용하므로 비관세지역인 자유무역지역을 선호하며, 중국 상하이 외교교보세구에는 비행훈련기관, 중동 두바이 자유무역지역에는 GM자동차 훈련기관이 각각 입주하여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고질적 영국병을 치유하고 경제회생에 성공한 영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첫번째 관심사를 고용창출에 두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세계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특정 지역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영국에는 중앙정부차원의 투자유치국(IBB)이 있지만 이보다는 잉글랜드 지방정부의 경우 반관반민 형태의 북부개발공사(NDC), 서부개발공사(WDC) 등의 조직과 웨일즈개발청(WDA), 스코틀랜드 투자유치청(LIS) 등의 지방정부차원 기구들의 활동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영국투자유치기구 중 가장 먼저 설립된 곳은 웨일즈 개발청이며, 영국전체 외국인투자유치의 20%를 인구 5%밖에 안 되는 웨일즈 지방이 차지하여 높은 투자유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에 효과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려면 영국과 유사한 투자유치조직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지원 확대

현행 조세감면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감면대상 요건의 완화수준은, 세계 각 국의 90%이상의 자유무역지역에서 조세감면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으므로 주요 경쟁국들의 감면수준 정도를 감안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의 초기 정착비용 완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는 투자를 통한 이윤창출과 투자자금의 안정된 회수를 원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초기 국내 정착시 발생하는 투자비용의 초기회수를 가능케 하도록 세계상의 특례조치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 소극적인 자세에서 한차원 높여 유럽국가들과 같이 지역개발을 위하여 보조금·융자금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즉, 프랑스, 영국 등 EU 지역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임금보조, 교육훈련비 보조와 유능한 전문기술자 유치를 위한 보조전 전문기술자 장려금, 그리고 마케팅개발 보조금 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방유치 지원

외국기업의 지방유치는 신규투자를 통해서 뿐 아니라 국내에 기 진출해 있는 외국계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존 투자업체에 대한 사후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에 항만, 도로, 국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이나 병원, 레저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지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금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비용의 보조, 사무소 임대료 보조, 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비용의 보조 등의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 (4) 관세자유지역과의 상호 보완관계 설정

자유무역지역은 공항만 주변지역 및 산업단지 등에 제조업·물류 등이 복합화 된 경제특구이며, 관세자유지역은 공항만 및 유통단지 등의 물류기능에 역점을 둔 경제특구이므로 양제도가 상호 보완 경쟁하면서 발전하도록 지향하여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도, 자유무역지역제도를 「수출가공구」와「보세구」의 2원적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군산항의 물류기능 강화문제는 현재 자유무역지역 예정지로 지정된 군산항 임항부지가 03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정식지정 될 경우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 2.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방안

### (1) 자유무역지역 통합관리 환경조성

자유무역지역에는 많은 공동화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비가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수단으로서의 자유무역지역 통합관리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지역 자체가 보안시설의 성격이 강하므로 펜스나 검사소, 폐쇄회로 카메라 등의 보안시설도 생겨날 것이고, 각 업체에 공급될 전력, 상수도, 도로, 통신망 등의 지원시설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냉동·냉장컨테이너를 장치하기 위한 전력공급이 가능한 장치장도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공동 시설물을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환경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욱이 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효과적인 설계나 배치를 위해서도 자유지역 내 토지나 도로 등 토지나 공동시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의 형성은 바람직 할 것이다.

### (2) 자유무역지역 정보공유체계 구축

또한, 인사, 회계, 영업, 경영정보, EDI 등을 인터넷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구축한다면 언제 어느 때라도 즉시 확인이 가능하며, 화물과 관련한 항목에 있어서는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 관련주체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창고업체들간의 경쟁관계로 인하여 효과적인 정보공유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정보공유 자체를 꺼리는 경향도 있으므로 업체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면 자사의 자료의 보안은 유지하면서 최대한 공동마케팅의 시너지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사의 영업오프라인과 거래가격 등은 보안으로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현재 창고의 적재율과 적재항목 등을 공개하여 화주들이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 화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담당실무자들간의 신속한 협의 및 의사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 라인을 구축하는 등 유통시기를 놓친 수산물이나 기타판로가 막힌 물품의 유통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 마케팅 모듈개발을 통한다면 구역 내 업체간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각 업체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의 장단점 및 업무프로세스를 검토한 후 보세 종합구역 내 물류들의 흐름을 즉시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하며, 특히 내국물과 외국물의 입고절차 및 관리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이를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파악 가능하게 하고 화주 및 통관업체의 자기물건관리, 운송업체정보 그리고 여유창고공간의 효율적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한다면 상당부분의 문제점들은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 위험물과 노후시설 및 관리 시설(선적, 주차장 등)에 관한 세부 측량 등을 통한 GIS 맵구축 및 공간DB구축 작업은 그 규모가 방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GIS 맵구축 및 공간 DB구축 작업을 수행한다면 궁극적인 시설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X25등의 EDI프로토콜 방식의 프로그램 인스톨비용 및 비용이 고가이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줄곧 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업체의 재고관리 시스템과 EDI 프로그램상의 품목간에 호환이 되지 않아 관리자가 이중으로 기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실제 전산상의 오류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화주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바 인터넷 기반으로 창고재고관리와 EDI 모듈의 통합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3. 현안과제의 해결

#### (1) 표준공장의 지속적 건립

표준공장 건립은 초기투자비용 완화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중국·대만 등 주요경쟁국과 경쟁가능한 여건을 조성(이들 국가는 자유무역지역 내에 모두 표준공장용 운용)하며, 또한 첨단기술 업종 등 성장주도산업의 공장입지 수요충족과 기계산업집적지로서의 추진전략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등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대만의 경우, 입주율이 10%에 불과하던 린광 임해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하여 표준공장을 건설한 결과 90%이상 입주하였다.

따라서, 정부 및 국회의 예산심의단계에서 동 소요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 외국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투자교류의 촉진을 위해서는 외국인 편의를 위한 시설확충이 요구된다. 외국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한국어, 국내 경제사회 환경, 상관행 등의 연수를 실시할 국제교류 연수시설 정비가 요구되며, 국내 기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준비활동에 필요한 단기임대 오피스텔, 회의장, 전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 비즈니스 교류 기반시설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설정비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기업에게는 보조금이나,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VISA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 국내체류비자 발급시 1~2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1~2년마다 비자의 연장갱신절차를 계속 거쳐야 하고 2회의 갱신이 끝나면 일단 출국하여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재발급 받아 입국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불편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경영자나 기술자 등 우수인력에 대하여 비자 연장기간 단위를 연장하여 장기 국내체류를 유도하거나 일정기간동안 NO VISA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인 생활편의의 제공이다. 국내진출 외국기업인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취득의 허용에 이어 의료보험, 우량저축상품(재형저축, 주택저축 등) 가입, 은행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도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경영자의 자녀가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의 학생이므로 이들을 위해 지방대에 International School의 설립 및 확충이 요구되며, 이밖에 주거, 의료시설, 레저 등 생활환경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

### (3) 현지 홍보활동의 강화

일본, 미국 등 투자유치 대상국의 주요 일간지, 잡지 등 미디어에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는 방안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경쟁국들은 이미 현지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 등 최신 홍보매체를 잘 활용한 사례로 태국의 투자유치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최우수 웹사이트로 선정된 것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 현지에 전문 비즈니스 화턴 외국인 투자관련 홍보유치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중앙정부 주도의 투자유치 사절단이 파견되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정부나 지방의 상공회의소가 주도하는 사절단파견을 유도해 가야 한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대하여 가지는 의문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현지에서 외국기업을 상대로 세미나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의 중요성 재인식과 적정한 예산배분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군산시, 「군장산업단지 주변여건 분석자료」, 1999.
- 군산시,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 1999.
- 군산시, 「군산개항 100주년기념 군산시 발전 시민 대강연회 자료」, 1999.
- 군산시, 「군장산업단지 주변여건 분석자료」, 1999.
- 군산시, 「군산통계연보」, 1998.
- 군산시·군산상공회의소·호원대학교, 「군산자유무역지역 발전방안 세미나자료집」, 2000. 4.
- 김용환, “군장 수출자유지역의 발전방향과 지역경제의 과제”, 「산업경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1999. 12.
- 김용환, “전북지역 외국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산업경영연구」, 호원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0. 8.
- 김준동,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김학소,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화를 위한 수출자유지역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양향 국제 Forum 및 국제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1997.



- 노성호·김영수, 「투자자유지역의 설치 및 제도구축방안」, 정책토론회자료 94-2, 산업연구원, 199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동향분석 속보 제01-16호, 2001년 6월 25일 참조.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구조 촉진을 위한 경제특구 활용방안」, 1998.
- 동아대학교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Free Zone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항만발전 전략에 관한 워크샵자료집」, 2001. 9.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소·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마산수출자유지역 25년사」, 1997.
-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수출자유지역의 발전방향」, 1998.
-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제적 효과와 활성화 방안」, 1996.
- 산업연구원, 「권역별·지역별 산업발전비전과 특화산업 진흥전략」, 1997.
- 산업연구원, 「수출자유지역의 제도개편 및 신규지정 방안(산업자원부 최종용역결과보고서)」, 1999.
- 이은재, 「환동해시대하에서 영동남부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지정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11권 제2호, 2000.
-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익산수출자유지역 현황」, 1999.
- 전라남도, 「대불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1998.
- 전라북도, 「군장수출자유지역 추진현황」, 1999.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총람」, 1999.
- 한국산업단지공단,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공장설립 가이드」, 1999.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세자유지역 도입방안 연구」, 1998.
- Branch, A. E., Element of Port Operation and Mangagement, London : Chapman and Hall, 1986.
- Bolin, R. L., The Changing World of Free Zones, The Flagstaff Institute, 1999.
- Bolin, R. L., Export Processing Zones Move to High Technology, The Flagstaff Institute, 1997.
- Foreign-Trade Zones Board, 1998 Annual Report, 1999.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9 :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Competitiveness, United Nations, 1999.
- World Bank, Export Processing Zones, Washington D.C., 1998.